

민주광장 - ㉔ 초등 전일제

교육 정책은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가

정부가 맞벌이 부부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전일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 전일제의 골자는 돌봄 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것과 코딩, 토론, 어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형 돌봄을 진행하는 것이다. 퇴근 시간이 늦은 학부모들은 찬성을 표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상자인 아동의 인권은 고려하고 있는가. 전일제가 시행되면 해당 초등학생들은 약 11시간 가까이 한 공간에 머물게 된다. 일부 연구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 연장이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신체 활동과 놀이로 적절한 정서 발달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 설계된

학교 교실은 방과후 놀이 활동과 쉽게 적합하지 않다. 아동의 발달에 맞게 돌봄에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전일제를 둘러싼 교원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에듀케어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현재 돌봄 교원의 고용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또 학교 교사들에게 방과후 및 돌봄 교실 관련 행정 업무가 가중되면서 기존의 정규 교육 과정에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 교원들이 오히려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이다.

끝으로 기존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학교 돌봄이 저소득층 가정에 현실적인 대안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되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현행 초등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이유로 학원을 더 선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일제로 양적 확대만 진행한다면 수요도 적을뿐더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정부가 초등 전일제를 통해 ‘돌봄 시간 연장’만을 내세우며 학부모의 인기를 얻으려 함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전일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유소년기에 필요한 돌봄과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 탐색에 중점을 두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돌봄 체계가 꼭 ‘초등 전일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김예담(사범대 교육21)

그럼에도 종일 돌봄은 필요하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하나 더 내놓았다. 초등 전일제다. 방과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법적 근거의 부재, 교원의 업무 과다, 대체 인력의 부재 등 제기되는 비판은 많다. 그럼에도 3가지 근거를 들어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는 교육의 역할 뿐 아니라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재하지만, 학교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실질적 공간이 돼가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은 보호받아야 함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다. 2022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 1233만 2000여 가구 중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423만 6000여 가구인데, 그중 36.7%인 115만

4000여 가구가 12세 이하의 자녀를 뒀다. 이때 최소 115만 4000명의 학생이 방과후 가정의 돌봄이 없는 환경에 놓인다. 이에 대한 방치는 당연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이 정책은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사교육에 투자할 충분한 재원이 없을 확률이 높다. 재원이 충분한 가정의 학생은 방과후 사교육기관에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가정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거나 경험을 쌓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에 남는 게 제도화된다면 사회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학습과정을 수월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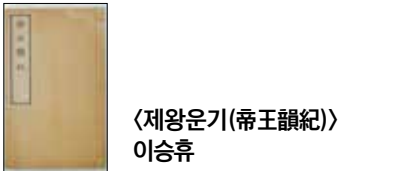
셋째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인의 보호

아래 또래와 공동생활한 경험은 관계형성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의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이들은 가정에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 관계형성 능력에 도움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 과다가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어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학생이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학교뿐이다. 업무 과잉 대안이 논의되며 교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겠지만, 학생들이 저녁에 안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서예인(보과대 보건환경20)

고대인의 서재



〈제왕운기(帝王韻紀)〉 이승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서는 고려 인종 때(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다. 〈삼국사기〉는 유교와 사대주의라는 당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 옛 기록들이 전해질 수 있었던 기미(驥尾)의 역할을 한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

〈삼국사기〉와 짝을 이루는 고려시대 역사서로 〈삼국유사〉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삼국유사〉는 불교를 기반으로 신이(神異)한 일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유교적 합리주의를 지향한 〈삼국사기〉와 꺾 다른 책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편찬된 또 다른 중요한 역사서로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가 있다. 〈제왕운기〉는 1287년 편찬되자마자 경상도 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됐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삼국유사〉가 일연 선사(1206~1289) 생시에 간행되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의해 비로소 간행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제왕운기〉에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보적인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 즉위한 원년부터 연대를 계산하는 단군기원(檀君紀元), 즉 단기(檀紀)를 처음 쓴 역사서가 바로 〈제왕운기〉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해(935년)가 단군 원년 무진(戊辰)년으로부터 3268년이 되는 때라는 것이다. 이

두 얼굴의 역사

는 고려가 신라를 통합한 해의 역사적 의미를 단군의 정통성을 빌려 강조한 것으로 단군을 국조(國祖)로 하는 역사의식이다.

서기 935년에서 3268년을 역산하면 단군 원년은 기원전 2333년이 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군기원은 조선시대 역사서를 거쳐 근대 민족주의 역사서에 이어졌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가의 공식 연도 표기 방식으로 채택돼 1961년까지 사용됐다. 요즘도 서기에 2333년을 더해 연도를 표기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올해는 단기로 4355년이 된다. 이는 모두 우리 역사가 단군으로부터 시작한 유구한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의식의 표현이다.

〈삼국사기〉는 우리 역사의 기원을 단군이 아니라 기자(箕子)로부터 찾았다. 중국 은나라 말기 현인인 기자가 동쪽으로 와 조선을 다스렸다고 하는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로부터 해동의 역사가 열렸다고 본 것이다. 이는 중국 역사서 속에 깔린 중화주의를 비판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근대 이후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반면 〈삼국유사〉가 단군의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첫 장에 자리매김한 것은 〈제왕운기〉와 같지만, 아직 단군 원년을 구체적으로 비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원년이 중국 요임금 50년 경인(庚寅)년이라고 한 ‘고기(古記)’를 인용하며, 요임금 원년은 무진년(戊辰)이므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직 단군기원 인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에 따르면 단

군 원년의 간지는 경인이다. 이는 〈제왕운기〉이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군 원년 무진설과 다르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단군이 갑진(甲辰)년에 개국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렇게 단군 원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참고한 중국 역사(曆書)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진년이 선택된 것이다.

〈제왕운기〉는 단군의 전조선(前朝鮮)을 우리 역사의 맨 앞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단군기원을 쓸 정도로 주체적인 역사 의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제왕운기〉는 사대주의를 합리화한 역사서라고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제왕운기〉상권에서는 중국 역대 제왕의 역사를, 하권에서는 동국 역대 군왕의 역사를 기술했다. 중국 역사의 정통이 반고로부터 원나라 황제까지 면면히 이어졌음을 칭송한 후 동국의 역사를 단군부터 시작해 고려 원종까지 서술했다. 특히 원종이 임연에 의해 폐위됐다가 원나라의 도움으로 복위한 사실을 기록하며 황은을 입었다거나 원종의 아들(충렬왕)이 부마가 되는 총애를 얻었다고 한 부분 등이 사대주의라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는 고려가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던 엄혹한 때라는 것을 상기하면 〈제왕운기〉의 양면성은 시대의 그림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제왕운기〉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이뤄지는 역사의 본성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역사 서술에서는 이런 양면성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박대재 교수(문과대 한국사학과)

KUTIME 〈214화〉

장정윤 전문기자



고대신문을읽고 1954호(2022년 8월 1일자)

고대 밖에서 보는 고대신문, 더욱 또렷한 기사를 기대하며

학보를 읽으며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누군가 고대의 ‘지금’을 공급해한다면 고대신문이 그 답이 돼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를 바라보는 고대인의 시선을 담아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화노동자 투쟁 및 세종동연 사태를 써 내려간 보도면과 쿼어 축제와 총학생회를 다룬 특집면은 주목할 만하다. **○신문의 얼굴 1면, 배치와 디테일이 아쉽다** =미화노동자 투쟁의 교섭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고대 밖의 사람도 사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 친화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1면의 대부분을 할애해 설명해야 했는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3면에 배치된 기사 요약은 1면에 배치하거나, 사태 요약을 인포그래픽으로 처리하는 편이 기사의 초점을 이번 교섭에 맞추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또한, 제한된 지면에 정보를 압축해 담아내려는 각고의 노력은 알고 있으나, 글에 연결사나 주어가 없어 전달력이 아쉬운 부분이 몇 있었다.

세종동연 기사는 4면과 1면에 실린 제목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게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종동연, 공공 내역 공개 못한 이유 있었다’가 온라인판 기사의 부제임을 고려하면, 편집국의 생각도 동일하리라. 한편, 지난 ‘고대신문을 읽고’의 피드백을 반영해 이 씨의 해명 청취 시도를 담아낸 점은 고대신문의 다음 호를 더 기대하게끔 하는 대목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6면 쿼어 축제 현장 스케치 기사를 읽은 후 기자가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빛속에서 펼쳐진 무

지개 깃발, 갈라진 시청 일대 이을까’라는 제목은 기사의 초점이 쿼어 축제에 있는지 혹은 두 행사의 대비를 그려내는 데 있는지 궁금증을 남긴다. 쿼어 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는 점과 쿼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적잖은 혐오 발언이 나온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쿼어 축제에 무게를 실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대신문의 역동감 넘치는 사진을 늘 사랑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제목에 걸맞은 사진을 볼 수 없어 섭섭했다. ‘대학 사회의 중심, 총학생회의 어제와 오늘’ 기사는 고대신문이 대학 사회 내부에서 직접 탈정치화되는 학생회를 포착했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다만, 기획 의도가 ‘대학 사회’의 총학생회와 ‘고대’의 총학생회 중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고대신문이 학보이지만 동시에 대학 언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후반부에 타 대학의 사례를 풍부하게 다뤘다면 더 많은 독자가 기사의 논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구효주 대학신문 편집장

